고향에 왔어요 11일 오후 광주역에 도착한 귀성객들이 발길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광주역과 광천동 버스 터미널 등지에는 밤늦게까지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靑 "박근혜 의원 예의도 모르나" 직격탄

"해도 너무 한다"…逆강도론 사과 요구

朴 "문제 있으면 처리하라" 정면 반박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가 '역강도론'으로 맞받아치고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박 전 대표가 이를 즉각 거부하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친이 진영과 친박 진영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지방선거 전후로 정치권의 지각변동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1일 청와대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강도론'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역 강도론'을 제기하며 비판한데 대해 해명과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박 의원 측이 선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나중에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포함한 친이 진영과 친박 진영의 신경전은 자주 있었지만 이처럼 청와대가 박 전 대표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수석이 여권 내에서 예의상 사용하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표현 대신 굳이 '박근혜 의원'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쓴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면대응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은 세종시 수정 문제와 맞물린 '박근혜 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박 전 대표가 강경 발언을 통해 정국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마치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그냥 묻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내부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박 전 대표는 "그 말이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특히, 이정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나 정부는 당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이 고생하며 정권을 창출해서 그분들도 청와대에 간 것 아니냐"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날렸다.

또한, 친박 진영 의원들도 청와대의 공개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격'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의 정국은 세종시 수정안 등을 둘러싸고 친이 진영과 친박 진영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금은 지방선거 승리위해 내부경쟁 필요"

민주당 복당 정동영 의원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이 선출해야"

정동영 의원이 지난 10일 민주당에 복귀했다. 지난해 4월 전주 덕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복당 의결 직후인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0개월만에 복당이 이뤄졌다. 심경은.

▲다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각별한 심정이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당 지도부에 섭섭한 점은 없나.

▲과거를 따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어떻게 보나.

▲한 마디로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요구됐으며 시장 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였던 사회였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소수 기득권에만 열린 사회가 아닌 상식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지난 10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 서야 한다. 국민 관심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특히, 용산 참사 등 힘없고 약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민주당이 소통하게 되고 수권 정당의 기반이 마련된다.

-민주당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 10년의 흐름을 좌우한다. 민주세력의 연합과 연대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MB 정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진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차이와 분열을 이겨내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우선 4월까지 선거 연대 방법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개혁 진영의 원로들이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복당이 이뤄지면서 차기 당권 및 대권 도전이 거론된다.

▲지금은 민주개혁세력의 명운이 달려있는 절박한 시기다. 당권 등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현재 필요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내부 경쟁이다.

-호남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상징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다. 며 이는 호남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시장 경선에서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이 선출해야 한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가능했던 것도 국민경선 때문이었다. 이를 질적이나 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위한 교량으로 거대 여당과의 1 : 1 구도를 만들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北 인권법안 의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여야간 논란이 됐던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는 반대하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 실효성이 없고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으며, 18대 국회 들어서도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연합뉴스